

농협·난방공사·마사회 등 공공기관 40곳 ‘정조준’

도, 에너지·AI 등 5대 전략 수립...통합특별시 출범 맞춰 선제 대응 지방선거 후 유치위 출범·대정부 설득 총력...“핵심기관 이전 집중”

전남도와 광주시가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겨냥한 공동 대응에 본격 착수했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전략을 앞세워 대규모 기관 유치전에 나선 것이다.

전남도는 1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황기연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상황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유치 전략을 논의했다.

양 시·도는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공공기관 이전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에너지·환경, 농수산, 인공 지능(AI) 등 첨단산업, 문화예술, 사회서비스 등 5개 분야 중심의 공동 유치 전략

을 마련했다.

유치 대상은 농수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환경공단, 한국항공공사 등 총 40개 기관이다. 산업별 연계성과 지역 파급력을 고려해 선별한 것으로, 통합특별시의 산업 기반 확장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노린 포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동향과 함께 1차 이전 성과 분석하고, 유치 논리를 보강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전남·광주는 기관별 기능과 지역 전략 산업 간 연결성을 강화해 설득력을 높여겠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지방선거 전까지 카드뉴스와

리플릿, 기관 현황 자료집 등을 제작해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을 알리고, 제도적 범위 내에서 여러 형성에 나설 계획이다.

선거 이후에는 통합특별시민 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켜 대규모 결의대회와 언론기고, 공공기관 노조 대상 팸투어,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해 유치 활동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황기연 권한대행은 “행정통합 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 우대 기조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와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에 파급력이 큰 핵심 기관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이 1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상황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광주전남국회의원들 “개헌은 사명...국민의힘 동참하라”

공동성명 발표 “5·18 정신과 함께 개헌 최선봉 설 것”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18일 국민의힘을 향해 “더이상 시간을 끌며 개헌 의의를 가로막지 마라.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고,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촉구하며 “개헌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의 안전장치를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과 단계적 개헌 추진, 그리고 6·3 지방선거일

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하며 늦어도 17일에는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한 데 대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추가 논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논의를 시작하자는데, ‘추가 논의’라니, 이 무슨 궤변인가?”라고 물으며 “국민의힘 스스로 개헌에 의지 없을 줄 드러내는 변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대에 맞는 헌법을 새로 만들자는 역사적 사명을 망각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며 “개헌에 대한 국민의힘 행태는 공당으로서 자격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우리는 우 의정의 개헌 제안이 39년 된 헌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고치기 위한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출발이라는 점에 적극 공감하며 지지한다”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시대에 맞는 헌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 민주주의 제도의 취약한 지점을 분명히 드러냈다”며 “다시는 불법적인 권력 남용과 민주주의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일은 여야 정치권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서영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 군수·군의원 예비후보 등록 22일 시작 공휴일도 접수 진행...지방선거 레이스 본격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지역 군수와 지역구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공휴일에도 접수가 가능해 사실상 지역 정치권의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부터 군수 및 지역구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등록신청 개시일이 공휴일이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동일 날짜에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진행되지 않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기준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등 피선거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탁금은 군수선거 200만원, 지역구 군의원선거 40만원으로 후보자 기탁금의 20% 수준이다.

연령과 조건에 따라 기탁금은 일부 감면된다. 장애인이나 29세 이하의 경우 군수 100만원, 군의원 20만원을 납부하면

되고, 30세 이상 39세 이하는 군수 140만원, 군의원 28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등 제한된 범위 내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특히 군수 예비후보자는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다. 또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일반 유권자도 가능하지만, 지동 동보통신 방식 문자 발송이나 대면접촉을 통한 이메일 발송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록을 해야만 가능하다.

후원회 구성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군수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최대 3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관련 문의는 전국 공통번호 1390번이나 관할 선관위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출한 전과기록과 학력 관련 자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도, 여수 석유화학산단 ‘위기지역’ 신청 검토

중동발 원료난·가동률 급락...정부 지원 요청 본격화

전남도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료 수급 차질로 여수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의 위기가 심화되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검토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가동률 하락과 수익성 악화가 겹치면서 지역 산업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여수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 업종이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 규제 강화 등 구조적 어려움에 더해, 중동사태로 원유와 납사 등 핵심 원료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실제 전남지역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의 공장 가동률은 50~60% 수준까지 떨어지며 손익분기점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원료 수급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일부 설비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검토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방침이다. 지정이 이뤄질 경우 고용 안정과 기업 경영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우선 고용 유지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의 한도와 지원 비율이 상향되고, 실직자와 무급휴직자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과 재취업 훈련도 강화된다.

세제와 금융 지원도 병행된다. 산단 입주 기업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이 가능해지고,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와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지역 상권 회복과 산업 기반 보강을 위한 지원도 뒤따른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신산업 육성, 국제 인프라 사업 추진 등 지역경제 전반을 살리는 후속 대책도 가능해진다.

전남도는 이번 조치를 단기 위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산업 구조 전환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친환경·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석유화학 산업 체질을 개선해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정부, 원유 위기경보 2단계 ‘주의’로 격상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 대응...비축유 2246만 배럴 발송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석유 수급 위기가 가시화되자 정부가 18일 오후 3시부터 원유에 대한 자원보안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중동 정세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국가자원보안 확보를 위한 고시’가 규정하는 ‘주의’ 단계 발령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같이 밝혔다.

자원보안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된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

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정부가 위기경보를 2단계로 격상한 이유는 현 상황이 단순히 위기가 예상되는 ‘관심’ 단계를 넘어 실제로 수급 불안이 가시화하는 ‘주의’ 단계 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기존 ‘관심’ 단계가 산유국 등의 정세 불안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나 수송로 차질이 ‘우려’되는 수준이었다면 이날 발령된 ‘주의’ 단계는 실제적인 위협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한다.

연합뉴스

▶1면 ‘합동토론회’서 계속

신 후보는 “기존 에너지고속도로 개념에서 발전한 정책”이라며 “송전 비용과 갈등을 줄이고, 서남해안의 저렴한 에너지 지역 기업 유치에 활용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는 생태

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8기 시도정에 대해서는 신정훈, 정준호 후보 모두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A조 후보 토론회에서 여성 정책과 관련된 공약이 전무한 점을 지적하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오는 19~20일 권리당원 투표 방식의 예비경선을 통해 본경선에 진출할 후보 5명을 가릴 예정이다.

치아 튼튼...광주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호응

올 1300명에 구강건강관리 지원

광주시가 초등학생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 추진 중인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예산을 투입해 아동 구강건강 관리 사업을 도입한 결과, 지난해까지 총 1만 7380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지난해에는 1347명이 지원을 받았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이며,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계층 아동, 2순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아동, 3순위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아동이다.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순위

별로 우선 선정한다.

사업 참여 아동은 보건소와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예방 중심 구강관리와 필요한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13년째를 맞은 올해는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초등학생 1300명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 구강 관리와 필요한 치료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자치구별 지원 인원은 동구 117명, 서구 286명, 남구 247명, 북구 325명, 광산구 325명이다. 사업 참여 및 이용 문의는 각 자치구 보건소 구강보건센터에서 가능하다. 주요 지원 내용은 구강검사, 불소도포, 치면세마, 칫솔질 교육, 치석제거 등 예방 진료 서비스와 충치치료 등 구강질환 치료 서비스다. 양동민 기자 yang00@

▶1면 ‘광주전남 청년’서 계속

분석 결과 상위 10% 지역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비수도권은 일부 제조업 기반 거점 도시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광주는 생활·문화 인프라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일자리 기반이 부족한 ‘정착유보지’로 분류됐다. 이는 청년들이 일상생활의 편의성이나 문화적 만족도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 기반이 부족해 정착을 망설이는 지역 유형이다. 실제 조사에서도 청년들이 거주지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문제로 나타났으며, 취업·사업 등 경제적 이유가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전남 지역은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상황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일자리와 생활·문화 인프라가 모두 부족한 ‘청년 유출지’로 분류되며, 청년층의 지속적인 이탈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분석됐다. 지역사회 유대감이나 공동체 의식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경제적 기회가 부족해 청년 유입 자체가 제한되고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구조는 단순한 인구 이동 문제를 넘어

지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또, 지역 내 갈등 문제도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외지에서 유입된 청년과 지역민 간 일자리 경쟁, 임금 격차에 대한 인식 차이 등이 갈등으로 이어지며, 이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에 이러한 갈등의 상당 부분이 경제적 기회, 즉 일자리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청년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청년을 지역으로 ‘유입’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청년들이 실제로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지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한 번쯤은 수도권 생활을 ‘경험’ 하고 싶어 한다. 청년들은 다양한 경험과 일거리를 접해보고 싶으나, 비수도권에서는 선택의 폭이 크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며 “중요한 것은 청년의 이동을 단순히 막기보다 다양한 경험 이후 지역으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일자리와 삶의 질, 문화적 경험, 사회적 관계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